

성년후견제도의 개정 방향과 내용

The direction of civil amendment and the subject matter of
the new adult guardianship in Korea.

배성호(Bae, Sung Hol)*

ABSTRACT

This study depicts about the issues on formal guardianship and Legal capacities in civil law (II). It describes the principles of that new civil amendment's directions (III), there are discussion about the main concept of new adult guardianship which based on civil law amendment, held on August 2009, on legal capacity system (IV). Last of all, it adds a remarks upon the few issues of new adult guardianship as a conclusion(V).

Key Words : 성년후견(adult guardianship), 민법개정(civil law amendment), 후견제도(formal guardianship), 행위능력(Legal capacities)

1. 서론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에 의하여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고령자, 정신적·지적 장애인 등이 후견인의 도움에 의하여 재산관리나 사회복지적 혜택,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새로운 성년후견제의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¹⁾ 고령자·장애인에 대한 권익보호정책도 단순한 현상유지에 의한 소극적 보호가 아니라 그들의 자율적 행위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적극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즉 무엇보다도 보호의 필요가 있는 성년자의 인간의 존엄을 고려하여 그의 의사와 능력을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²⁾

성년후견제라 함은 노령화에 의하여 의사결정능력의 저하가 초래된 고령자, 치매자, 정신적·지적 장애인 등의 의사능력저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잔존능력을 활용하여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법적 행위, 재산관리, 신상보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등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의 성년후견제도인 민법상 한정치산·금치산제도는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의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1) 성년후견제도연구회, 성년후견제도 연구, 2007, 4면 이하.

2) 제철웅, 성년후견제도의 개정방향, 민사법학 제42호, 2008, 136-138면.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본인의 재산관리에 치우쳐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후견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금치산자는 행위능력이 완전히 상실되므로 잔존능력이 있더라도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한정치산자는 후견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행위까지도 후견인의 동의가 요구되므로, 현행 성년후견제도는 실제 이를 이용하기가 어려웠다. 이와 같이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을 고려함이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일률적 행위능력의 제한 그리고 박탈 등으로 인하여 피보호성년의 사회생활의 원천적 봉쇄 등으로 인한 이용빈도의 저조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³⁾

또한 고령자나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판단능력의 저하 정도나 보호 필요성의 정도는 다양하다. 따라서 획일적 내용의 성년후견제도로는 구체적인 사안에 적합한 탄력적인 보호조치를 기대할 수 없고, 고령자나 장애인이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없다.⁴⁾

이에 그동안 성년후견과 관련하여 행위무능력제도를 개혁하기 위하여 많은 시도가 있었고,⁵⁾ 현재에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제2분과에서 2009년 2월부터 민법상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하고,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⁶⁾

이하 본고는 한국의 현행 민법상 행위능력·후견제도와 그 문제점(Ⅱ),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적 기초 및 그 근본이념에 비추어 본 개정방향(Ⅲ)에 대하여 살펴보고, 현재 진행 중인 민법상 행위능력제도 개정과 관련하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년후견법제의 개정방향, 개정 성년후견법제의 기본구조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2009년 8월을 기준하여, 그 논의되는 바를 소개하고(Ⅳ), 마지막으로 결론에 갈음하여 성년후견제를 개정함과 관련되는 몇 가지를 부언하면서 마무리 하고자 한다(Ⅴ).

Ⅱ. 한국의 현행 민법상 후견제도와 문제점

1. 민법상 행위무능력자 및 후견제도

현재 한국에서는 성년자가 지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여 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인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 제도를 두고 있다.

3) 사법연감에 나타난 한정치산, 금치산 신청사건의 접수건수는 2000년에 258건, 2001년에 323건, 2002년에 421건, 2003년에 433건, 2004년에 473건에 불과하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참조.

4) 성년후견제도연구회, 1면.

5) 17대 국회에서 이은영 의원 등 21인이 2006.12.7. 제출한 민법 일부개정안; 장향숙 의원 등 10인이 2007.11.22. 제출한 민법 일부개정안 등

6) 김형석,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개정의 방향과 기본내용, 한국민사법학회 2009년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55면 이하 참조.

심신이 미약하거나 재산의 낭비와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하며(민법⁷⁾ 제9조),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위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제12조). 한정치산자의 능력은 미성년자의 그것과 같아 한정치산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제5조 제1항), 이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5조 제2항). 한편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제13조).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을 통하여 보호되고, 감호된다. 여기에 서 후견이란 자기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국가의 감독하에 그와 같은 자의 재산에 관한 일을 돌보아 주는 제도를 말하는바, 한정치산자 그리고 금치산자를 보호, 교양, 감호하고, 그 자의 행위를 대리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무능력자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성년자에 한정하여 후견을 살펴보면, 한정치산·금치산의 선고가 있는 경우에 후견이 개시된다(제929조). 이 경우 1인의 후견을 두어야 하며(제930조), 미성년자의 후견과는 달리 지정후견인이 없이 법정후견인과 선임후견인을 둔다.

법정후견인은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혈족·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된다(제933조). 이 때 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가 후견인이 되고, 배우자도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후견인이 된다(제934조).

선임후견인은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에게 선임후견인이 없는 경우와 후견인이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재하게 된 때에, 법정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후견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한다.

금치산자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요양, 감호하는 의무를 지며(제947조 제1항), 금치산자를 사택에 감금하거나 정신병원이나 기타 다른 장소에 감금치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가정법원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제947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라류사건 제16호).

2. 문제점

(1) 민법상 행위능력제도의 문제점

민법상 한정치산·금치산 선고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⁸⁾

7) 이하 법령의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민법을 지칭한다.

8) 성년후견제도연구회, 19-20면.

- ① 현행 제도는 거래안전의 보호와 자산유지를 중시하여 개인의 존엄이나 권리옹호라는 점은 무시되어 있다.
- ② 공시방법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친족들의 저항감이 커서 제도이용 자체가 기피되고 있다.
- ③ 고령자 보호와 관련하여 현행 행위능력제도는 일률적으로 행위능력을 광범위하게 제한하여 본인의 잔존능력의 활용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 ④ 대상자의 판단능력, 보호의 필요정도는 다양함에도 법적으로 2개의 유형 사이에 크게 다른 행위능력의 제한이 가해지는 경직된 이원적 제도이어서 개개의 사안에 있어 정신능력 및 보호의 필요성의 정도에 합치한 탄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 ⑤ 금치산자는 행위무능력이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법률행위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 등과 같은 일정한 일회적 법률행위에 관하여만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광범위한 행위능력을 제한하여 자격제한을 받는 결점이 있다.
- ⑥ 심신상실, 심신미약이라는 요건이 엄격하여 고령자에게는 이용이 곤란하다.
- ⑦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의 지위남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감독이나 제재가 미흡하다.

(2) 민법상 후견제도의 문제점

민법상 후견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⁹⁾

- ① 자연인만을 법정후견인으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의 개호를 업무로 하는 사회복지기관과 같은 법인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후견을 위한 재원의 확보나 그러한 자들의 양성, 교육이라는 면에서 문제가 있다.
- ② 기혼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그 배우자가 후견인에 선임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방 배우자가 고령일 경우, 상대방 배우자도 고령이라는 점이다. 또한 배우자를 법률상의 배우자에 한정함으로써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③ 제935조 제1항은 연장자를 선순위의 후견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요후견상태에 있는 자보다도 더 고령인 자가 후견인이 되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 ④ 현행법은 후견인을 1인으로 한정하여 재산관리와 신상감호를 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후견인의 임무가 극히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산관리사항에 대하여도 1인의 후견인이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⑤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은 재산관리권과 대리권만을 갖게 되므로 신체상의 보호에

9) 백승흠, 현행 성년자보호를 위한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으로서의 성년후견제도, 민사법학 제24호, 2003, 411-413면; 동, 성년후견의 감독에 관한 고찰—독일과 일본의 제도를 비교하여—, 가족법연구 제20권 2호, 2006, 65면 이하; 성년후견제도연구회, 16면 이하, 20면.

관한 권리의무는 없다. 한정치산과 금치산의 명백한 기준이 없는 정신능력의 판별이라는 점에서 심신이 박약한 한정치산자의 경우도 금치산자와 같이 요양감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피보호자의 재산관리와 신상감호 중 종래는 민법 규정상 재산관리만이 중시되고 신상감호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⑥ 후견감독기관이 친족회로 되어 있는데, 현행 친족회제도는 친족회원을 선임하는 절차, 친족회를 소집하는 절차 및 친족회의 결의절차가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후견인을 감독하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⑦ 법정후견인제도는 후견의 공백상태가 생길 여지를 줄여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불가능하고, 또한 이 제도가 악용되면 본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⑧ 법원에 의한 후견인 선임과 관련하여 제7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제936조에 의하면 일정한 자의 선임청구가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없고, 따라서 피후견인의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III.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적 기초 및 개정방향

1.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적 기초

성년후견제도는 사회복지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의 사회복지정책은 공급자 위주의 복지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수급자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용자 중심의 복지로 변화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의 서비스 이용자는 경제적·육체적·정신적 또는 사회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약자로 간주하여 왔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보장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와 같이 복지 이용자를 보호하여야 할 약자로만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사회복지 이용자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받아들이고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 및 이용자의 권익 대변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입안이 절실하다.¹⁰⁾ 그 일환이 본고의 주제인 성년후견제도이다.

이와 같은 성년후견제도는 자기결정권의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 보편화의 실현, 정상화(normalization), 행위능력의 탄력화·유연화 등을 그 근본이념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¹⁾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 성년후견제도연구회, 9면, 12-13면.

11) 성년후견제도연구회, 10-12면; 송호열, 성년후견법제화의 기본원칙과 방향, 동아법학 제33호, 2003, 181면 이하; 이주형, 성년후견제도, 민족법학논집 제4집, 2003, 234-235면; 이명현, 복지 서비스 이용자의 애드보커시를 위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연구, 사회법연구 제1호, 2003, 219-225면.

2. 성년후견제도 개정의 기본방향

우선 성년후견제도는 요보호성년이 자신의 잔여생애를 존엄하게 사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이어야 한다. 의사결정능력이 취약한 상태에서도 가능한 한 스스로의 결정을 존중하고, 보호자가 요보호성년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순간에도 평소 요보호자의 가치관, 세계관, 감정을 존중하는 결정이 이루어질 때 이와 같이 보장될 것이다.¹²⁾ 즉 성년후견제도는 자기결정권의 최대한 존중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그리고 지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특별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존중하여 정상인처럼 대우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하는 정상화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¹³⁾

성년후견제도의 가장 큰 정점은 고령의 피후견인의 보호와 그 자원의 보전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반영되는가에 있다.¹⁴⁾ 인간의 존엄성이 의사결정능력이 없어진 순간에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요보호성년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원칙, 요보호성년의 정신능력을 범주화하지 않고, 이를 개별화하여 필요한 보호를 제공할 것, 국가의 개입은 필요한 경우 최소화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고, 그 때에도 정신능력의 상실정도에 비례하여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하위원칙으로 도출할 수 있다.¹⁵⁾

3. 성년후견제도 개정의 구체적 방향¹⁶⁾

(1) 요보호성년에 대한 보호는 재산관계분야뿐만 아니라 신상보호영역에도 미쳐야 한다.

(2) 요보호자의 자기결정권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보호제도의 선택, 보호조치의 선택, 보호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법정성년후견과 보호자와 보호내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임의성년후견 등의 지속적 보호와 함께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특정명령제도와 특별수임인제도 등의 개별적·일시적 보호제도를 동시에 제공하고 이를 선택하도록 하여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3) 본인의 잔존능력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그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 보호조치에 있어서도 요보호성년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본인을 대신한 의사결정은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후원인제도, 한정후견인, 후견인제도를 두더라도 그 내용

12) 제철웅, 136-137면.

13) 성년후견제도연구회, 2면.

14) 이덕환, 미국에 있어서 성년후견제도의 개혁, 한양법학 제11집, 2000, 7면 이하.

15) 제철웅, 137-138면.

16) 제철웅, 138-142면.

은 개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어야 한다(개별성, 비례성, 최소개입의 원칙).

(4) 의료적 처치에 있어서도 동의, 치료거부, 나아가 생명연장조치에 대한 거부와 관련하여서도 요보호성년 자신의 의사를 존중해야 그의 존엄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5) 요보호성년을 가족이 아닌 전문가가 임의후견인 또는 법정보호자로서 돌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IV. 민법개정위원회에서의 성년후견법제의 기본구조 및 그 내용

1. 성년후견법제의 기본방향

(1) 우선 성년후견법제의 기본구조에 대하여 다음의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¹⁷⁾

첫째, 요보호자의 상태 및 보호의 내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여러 가지 보호유형들을 인정하는 다원적 구성

둘째, 하나의 보호유형을 인정하고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는 일원적 구성

① 독일 민법은 대표적으로 일원적 구성을 취하는 입법례이다. 독일 민법은 법적 부조라고 하는 단일한 유형의 보호제도를 두고 있다. 부조인은 선임된 사무범위에서는 피부조인의 법정대리인이 되지만(독일민법¹⁸⁾ 제1902조; 제한은 독민 제1908i조 제1항 참조), 피부조인의 행위능력은 원칙적으로 부조의 개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자이다. 다만 그는 개별적인 경우에 의사능력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피부조인의 신상과 재산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후견법원은 피부조인이 부조인의 사무범위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할 수 있는데, 이를 이른바 동의유보라 한다(독민 제1903조 제1항 제1문; 예외는 동조 제2항). 그러한 경우 피부조인이 단독으로 한 행위는 부조인의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동조 제1항 제2문; 제108조 제1항 참조). 그러나 신상보호와 관련된 여러 중요한 조치, 즉 의학적 조치, 주거이전, 전화·서신의 제한 등에 대하여는 후견법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독민 제1904조 이하 참조).¹⁹⁾

17) 백승흠, 성년후견제도의 입법방향, 민사법학 제18호, 2000, 196면 이하; 동, 현행 성년자보호를 위한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으로서의 성년후견제도, 413면 이하; 성년후견제도연구회, 264면 이하.

18) 이하 독민이라 한다.

19) 김선이, 독일 성년후견법, 고령사회와 성년후견제도, 한국법제연구원, 2003, 50-72면; 김형석, 57면; 성년후견제도연구회, 74면 이하.

② 이에 대하여 프랑스 민법은 요보호인의 상태에 따라 후견과 보좌를 두고, 일시적·잠정적 보호제도인 사법적 보호제도를 두고 있다(프랑스민법²⁰⁾ 제433조 제1항, 제440조).²¹⁾

후견은 민사적 법률행위에 있어 지속적인 방법으로 대리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개시되며(불민 제440조 제3항), 원칙적으로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불민 제473조 제1항, 제496조 제1항; 대리권의 제한은 제505조 이하). 그러나 피후견인이 반드시 전면적인 행위무능력자인 것은 아니며, 후견법원은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나 후견인의 조력을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를 열거할 수 있다(불민 제473조 제2항). 피후견인이 대리되어야 하는 행위를 단독으로 하는 경우, 이는 당연히 무효이다(불민 제465조 제1항 제3호).

보좌는 민사생활의 중요한 행위에 있어 지속적으로 조언이나 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개시되는데(불민 제440조 제3항), 보좌인은 기본적으로 행위능력을 보유하지만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때(불민 제505조 내지 제508조)에는 보좌인의 조력이 있어야만 한다(불민 제467조 제1항). 후견법원은 보좌인의 조력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열거할 수 있고, 반대로 보좌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행위를 추가할 수도 있다(불민 제471조). 보좌인은 피보좌인을 대리할 권한은 없다(불민 제469조 제1항). 피보호인이 조력을 받아야 하는 행위를 단독으로 한 경우에는 피보호인이 손해를 입었다는 입증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불민 제465조 제1항 제2호).

사법적 보호는 일시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거나 특정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리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위하여 개시하며(제433조 제1항), 기본적으로 행위능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동조 제2항 참조). 그러나 이에 의하여 후견법원은 임의대리인의 대리권을 철회·정지하거나(불민 제436조 제1항) 특별수임인을 선임하는 방법에 의하여(불민 제437조, 제438조) 요보호인에 대하여 조력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게 된다.

③ 또한 일본의 경우 프랑스 법제를 참조하여 종래 제도의 연속선상에서 요보호인의 정신적 능력의 정도에 따라 후견, 보좌, 보조의 세 가지 보호제도를 두고 있다.²²⁾

후견이 개시되는 경우 일상거래가 아닌 한 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일본민법²³⁾ 제10조), 그를 위하여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일민 제859조).

보좌의 경우 피보좌인은 일정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보좌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일민 제13조 제1항, 제4항). 가정법원은 보좌의 심판을 할 때 법률이 정하는 경우 이외에도 그 보좌인의 동의를 받

20) 이하 불민이라 한다.

21) 김형석, 58면; 성년후견법제연구회, 48면 이하; 홍춘의, 프랑스의 성년후견제도, 교정사회와 성년후견제도, 한국법제연구원, 2003, 10-48면.

22) 김형석, 58면; 성년후견법제연구회, 110면 이하.

23) 이하 일민이라 한다.

아야 하는 취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그러나 보좌인은 피보좌인을 대리할 권한은 없으나, 가정법원이 개별적으로 대리권을 부여할 수는 있다(일민 제876조의4).

보조의 경우 피보조인은 원칙적으로 피보조인이 이들 행위를 할 때에는 보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할 수 있으며(일민 제17조 제1항), 동의가 없는 때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동조 제4항). 보좌인과 마찬가지로 보조인은 법정대리권이 없으나, 가정법원이 개별적으로 대리권을 부여할 수는 있다(일민 제876조의9).

(2) 결국 민법개정위원회 제2분과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유형을 인정 하되 각각의 유형에 탄력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할 여지를 부여하기로 하는 입장을 채택하였다. 그 이유는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학계와 실무계에서 성년후견제도의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결과 어떠한 방향으로 입법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수렴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기존 법상황에 대한 급진적인 변경을 가져오는 입법은 오히려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²⁴⁾

따라서 제2분과의 입법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민법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에 대응하는 두 가지 유형을 인정하면서, 보호인의 능력과 필요에 따른 탄력적 보호를 위하여 추가적인 보호제도가 검토되고 있다. 이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 특히 요보호인의 능력과 의사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었다는 문제점들을 제거하고 각각의 유형에 탄력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들을 채택한다는 것이다.²⁵⁾

2. 성년후견법제의 기본구조

(1) 서

제2분과에서는 이상과 같은 성년후견법제 개정의 기본방향 하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년후견, 한정후견, 후원이라고 하는 삼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²⁶⁾

(2) 성년후견

우선 금치산에 대응하는 보호유형으로, 성년피후견인은 가정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

24) 김형석, 59면.

25) 김형석, 60면.

26) 물론 성년후견, 한정후견, 후원이라는 용어는 민법개정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이와 관련된 용어의 선택도 현재 제2분과에서 논의되고 있다. 김형석, 63-64면.

리고 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다.

이와 같이 성년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유형을 인정하는 것이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를 불식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의 개시요건을 명확한 문언으로 규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성년후견은 지속적으로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요보호인을 위하여 개시한다고 하였다.²⁷⁾

(3) 한정후견

다음으로 한정치산에 대응하는 보호유형으로, 한정피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보유하지만, 일정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가 고려된다.²⁸⁾

첫째, 종래 한정치산의 경우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은 미성년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원칙적으로 재산법상의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였으며,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요보호인의 정신적 능력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한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가정법원에 구체적으로 요보호인의 정신적 능력을 고려하여 잔존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동의 유보 규정이 요청된다.

이에 제2분과는 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유지하지만, 일정한 법률행위에 한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가정법원이 요보호인의 능력을 고려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법률행위의 목록을 심판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를 규정함에 있어 제2분과 내에서 두 가지 입법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나는 독일 민법 제1903조 제1항에서와 같이 동의를 필요한 법률행위의 기본적 예시 없이 가정법원이 탄력적으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형식이고, 다른 하나는 프랑스 민법 제467조, 일본 민법 제13조에서와 같이 기본적으로 동의를 필요한 법률행위를 예시하면서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출발점으로 하여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형식이다. 현재 제2분과에서는 후자의 규정 형식에 의하는 것을 전제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²⁹⁾

둘째, 동의유보가 있는 경우, 한정후견인에게 동의권 및 그와 결부된 취소권이 있는 것은 의문이 없으나, 그 밖에 한정후견인을 한정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하여 민법의 입법자는 의식적으로 한정치산자를 위하여 동의권만을 가지는 보좌인이 아니라 법정대리권도 가

27) 김형석, 60면.

28) 김형석, 60면.

29) 김형석, 61면.

지는 후견인을 두는 입법을 하였고,³⁰⁾ 이것이 현행 민법의 내용(제929조, 제949조)이기도 하기 때문에, 입법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견수렴이 없는 한, 기존의 구조를 유지하여 법적 연속성,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제2분과에서 입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³¹⁾

(4) 후원

① 상기의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이외 요보호인의 능력과 필요에 따른 탄력적 보호를 위하여 추가적인 보호제도가 검토되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후원이라고 하기로 한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그것이 개시되면 이후 종료심판이 있을 때까지 계속되는 지속적 보호제도이다. 그런데 법률이 제공하는 보호조치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반드시 지속적, 포괄적 보호제도에 의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정신적 능력이 다소 미약한 정도이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는 가족의 보호를 통하여 무난한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특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개별적, 일시적 또는 일회적으로 가정법원의 보호조치를 받고자 하는 법적 수요가 존재할 것이다.³²⁾

② 이와 관련하여 영국법상 법원은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일정한 명령을 하거나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나, 신상보호를 포함한 일반적인 특정명령 제도는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국 판례는 다른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었고, 2005년의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05)은 법원으로 하여금 재산관리·신상보호를 포괄하는 특정명령을 가능하게 하면서,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여 법정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정신능력법 제16조).³³⁾

또한 프랑스 민법의 사법적 보호는 이전에는 후견이나 보좌가 개시되기 전의 잠정적 관찰·보호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2007년의 개정으로 “일시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거나 특정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리될 필요가 있는 사람”(불민 제433조 제1항)에 대하여 개시되는 독점적 보호제도로 재정립되었다. 사법적 보호를 받는 자는 행위능력자이며, 피보호자의 재산은 본인, 본인의 수임인, 제3자, 후견법원이 선임한 특별수임인 등이 관리하게 된다.³⁴⁾

③ 이에 제2분과에서도 지속적·포괄적 보호조치와 함께 일회적·특정적 보호제도를 인정하는 입법방향에 대하여 대체로 합의하였고, 아래 제2분과에서 준비 중인 후원에 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0) 민법안심의록, 상권, 1957, 11면 참조.

31) 김형석, 61면.

32) 제철웅·오시영·백승흠·박주영, 행위무능력 제도의 재검토, 법무부, 2007, 133면.

33) 김형석, 61면; 제철웅·박주영,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논의와 영국의 정신능력법의 시사점, 가족법연구 제21권 제3호, 2007, 275면 이하.

34) 김형석, 62면.

가정법원은 후원 개시의 심판에 의하여 요보호인의 재산 또는 신상과 관련된 특정한 법률문제, 즉 중요한 재산상 법률행위, 중대한 치료행위의 결정 등의 해결을 위한 특정 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정법원은 특히 특정명령으로 피후원인에 조력하는 후원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피후원인의 필요에 따라 후원인에게 특정 문제에 대한 법정대리권을 부여하는 심판을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회적, 특정적 보호제도로서의 후원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아직 논의 중에 있다.³⁵⁾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후원 개시의 요건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후원은 정신적 능력의 상태가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더라도 요보호인 또는 관련 청구권자가 후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속적 법정후견 대신 일시적인 보호만을 받고자 하는 그들의 욕구를 고려하여 후원을 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의견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에서 문제되었던 연명치료의 중단과 같은 사안³⁶⁾ 또는 일시적으로 의식이 불명한 사람에 대한 중대한 투약 결정과 같은 사안에서 일회적·특정적인 후원심판에 의하여 법원이 특정한 처분을 명하거나 아니면 의식불명의 환자를 감음하여 결정을 할 후원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의견은 앞서 서술된 견해에 따른 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후원에 의하려고 하는 시도가 지나치게 많아져서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가 잠탈될 우려가 크다고 한다. 따라서 이 견해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후원을 요보호인의 정신능력의 정도에 따라 단계화하여 부여되는 보호제도로 이해하고자 하며,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후원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후원은 정신능력의 제약이 경미한 사람들을 위한 보호제도로 구상되어, 가령 연명치료의 중단이나 투약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요보호인의 정신적인 능력이 현저한 장애를 겪고 있으므로 지속적·포괄적 보호제도인 성년후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필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한다.³⁷⁾

다음으로 후원심판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특정명령을 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피후원인의 행위능력을 특정적·국소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가령 요보호인이 주변의 권유에 의하여 자신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법적 거래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금지명령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이 특정 법률행위에 대하여 후원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동의유보 심판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³⁸⁾

35) 김형석, 63면.

36) 대판(전) 2009.5.21, 2009다17417

37) 김형석, 63면.

38) 김형석, 63면.

3. 성년후견법제의 내용

(1) 서

성년후견법제의 내용으로 의사능력에 관한 정의규정을 둘 것인지,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이 개시된 경우 그 공시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³⁹⁾ 요보호인이 자신의 보호관계를 스스로 규율하는 임의후견의 법률관계 및 법정후견과의 관계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⁴⁰⁾ 등의 중요한 문제가 아직 제2분과에서 심의되지 않았다.⁴¹⁾

이하에서는 성년후견 절차개시 청구권자는 성년후견의 개시와 관련하여 신체적 장애가 성년후견 개시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성년후견인의 선임, 성년후견인의 임무와 감독 등에 관하여 제2분과에서 심의되고 토의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성년후견의 개시사유로서 신체적 장애

종래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는 요보호인의 정신적 능력의 제약을 이유로 하여 개시되는 보호제도이고, 이는 기본적으로 성년후견, 한정후견에서도 같다. 즉 통상적인 정신적인 질병, 장애 또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판단능력이 제약되는 경우가 주된 적용대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제2분과는 잠정적으로 신체적 장애는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으로 채택하지 아니하는 방침을 정하였다. 여기서 특히 우리 민법이 “聾者, 啞者, 盲者”를 준금치산자로 정하던 의용민법의 규정을 폐지하였고, 민법 초안이 “신체에 중대한 결함”을 한정치산 원인으로 하고 있던 것이 심의과정에서 삭제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정책적 논거로 고려되었다.⁴²⁾

그러나 의학적인 인식에 따르면 신체적 장애에 의하여 원활한 의사표시가 어려울 수 있는 경우가 실제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2분과는 일단 정신적 장애만을 개시사유로 하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이후 의학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다시 한 번 검토할 기회를 갖기로 하였다.⁴³⁾

39) 성년후견제도연구회, 360면 이하.

40) 송호열, 임의성년후견제도, 동아법학 제31호, 2002, 271면 이하; 성년후견제도연구회, 334면 이하.

41) 김형석, 68면.

42) 김형석, 64면.

43) 김형석, 65면.

(3) 성년후견 절차개시 청구권자

현행 민법은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의 청구권자로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를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11조). 이러한 규정을 새로운 입법에 그대로 반영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제2분과는 현행 민법과 같이 청구권자를 특정하는 입법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우선 우리의 사회현실상 먼 친족이나 이웃이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등의 수고를 자원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결국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 민법이 예정하는 정도의 근친이 실질적으로 절차의 개시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법률이 당해 근친을 청구권자로서 규정하는 것은 가정법원의 심판에 대한 불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27조) 바람직하다.⁴⁴⁾

또한 이와 관련하여 종래 검사의 청구에 의한 절차 개시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정신장애자, 노령자의 일상에 대하여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권을 인정하는 입법안을 마련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정신보건법과 노인복지법에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둘 것을 고려 중이다.⁴⁵⁾

(4) 성년후견인의 선임

현행 민법은 한정치산, 금치산이 선고되면 후견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고(제933조 내지 제935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법원이 이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제936조).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결국 근친들과 요보호인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많은 경우에 요보호인이 법률이 정하는 보호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회피하는 결과를 발생시켜 왔다. 더구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고령자인 경우, 당연 후견인인 그의 배우자 역시 고령인 경우가 많아 후견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었다. 따라서 성년후견이 요보호인의 이해관계를 보호함으로써 쉽게 의지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후견인의 당연지정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폐지하고, 오히려 가정법원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제2분과는 이에 대한 적절한 주의도 고려하고 있다.⁴⁶⁾

(5) 성년후견인의 임무와 감독

① 신상보호

44) 김형석, 65면.

45) 김형석, 66면.

46) 김형석, 66면.

현행 민법의 한정치산, 금치산 규정은 기본적으로 요보호인의 재산관리를 주요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요보호인의 신상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그다지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성년후견의 입법에서는 요보호인의 재산관리에 못지 않게 신상에 관한 중요한 결정에 관하여 성년후견인이 조력할 것을 명백히 하면서 동시에 그에 대한 감독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현행 민법 제947조 제1항에서 금치산자의 요양, 감호에 대한 후견인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 후견인이 금치산자를 사택에 감금하거나 정신병원 등 다른 장소에 감금치료함에는 긴급한 경우가 아닌 한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2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은 단순히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안에 한정될 수는 없고, 오히려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치료행위나 거주지 자유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내용의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동의 등에 대하여도 가정법원의 감독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의료적 침습, 치료행위, 주거의 안정성과 관련된 법률행위 등이 그러하다. 따라서 제2분과에서는 요보호인의 신상보호에 관한 규정을 확대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⁴⁷⁾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상보호에 관한 사항도 동의유보의 대상이며, 특히 전화·서신의 제한에 대한 동의, 의료행위 등에 대한 동의, 불임시술에 대한 동의, 주거변경 특히 시설수용 등에 대한 동의 등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피보호인은 능력이 허락하는 한 자신의 신상에 관한 결정을 단독으로 행하지만, 피보호인이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경우 법원 또는 친족회는 보호인의 조력이나 대리를 받도록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긴박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호인은 법원이나 친족회의 동의없이 피보호인의 신체의 완전성이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수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그리고 피보호인은 자신의 주거지를 선택하고, 제3자와 면접교섭 등의 권리를 가지지만, 그러한 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나 친족회가 이를 정한다. 그 밖에 주거와 가구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피보호인의 처분에 따르고, 피보호인의 이익이 처분·임대차의 해지 등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 또는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하다.⁴⁸⁾ 일본의 경우에도 신상배려에 대한 특별규정은 두지 않았으나, 일본민법 제858조에서 성년피후견인의 의사존중 및 신상배려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일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이는 내용상 신상보호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⁴⁹⁾

② 감독기관

현행 민법은 후견인의 감독기관으로 친족회를 규정하고 있는데(제960조 이하), 이는

47) 김형석, 67면.

48) 김형석, 67면.

49) 김형석, 67면; 本澤巳代子, 高齢者の財産管理・監護, Jurist 民法の争点(内田貴・大村敦志 編), 2007, 344-345면.

관습상 친족단체와는 무관한 법률상의 상설기관이다(제960조, 제965조 제1항). 그러나 친족회는 현실에 있어 후견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후견인의 감독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⁵⁰⁾

또한 성년후견법제를 개정함에 있어, 미국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⁵¹⁾ 훌륭한 제도구상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어떻게 시행되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데, 후견인의 감독 문제가 시행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성년후견법제를 개정함에 있어 감독기관으로 친족회를 유지할 것인가 등 성년후견의 감독기관에 대하여 제2분과에서는 현재 논의 중에 있다.⁵²⁾

이에 는 현행과 같이 친족회 제도를 유지, 개선하여 후견감독기관으로 존속시키는 방법과 친족회를 폐지하고 이에 갈음하여 후견감독기관 또는 성년후견감독인을 두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도 성년후견감독인을 두는 경우에는 이를 필수적 기관으로 할 것인지 임의적 기관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

V. 결론에 갈음하여

이상으로 한국에서의 성년후견제도의 개정방향과 그 내용에 대한 정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성년후견제도를 개정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부언하면서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성년후견제도를 개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고령의 요보호성년의 보호와 그 사적 자치의 존중 간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성년후견제도는 요보호성년이 자신의 잔여생애를 존엄하게 사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이어야 한다. 의사결정능력이 취약한 상태에서도 가능한 한 스스로의 결정을 존중하고, 보호자가 요보호성년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순간에도 평소 요보호자의 가치관, 세계관, 감정을 존중하는 결정이 이루어질 때 이와 같이 보장될 것이다.

또한 성년후견제도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요보호인의 재산관리 외에도 신상에 대한 중요한 결정에 관하여 성년후견인이 조력할 것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또한 요보호성년은 일반적으로 고령이고 판단력이 저하 되어 있기 때문에, 성년후견인에 의한 착취, 권한 밖의 학대, 자기 태만 등에 성년후견제도의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즉 성년후견인에 대한 감독과 관련하여 이 점에 대하여는 특별한 주의와 심도 있는 연구를 요한다.

50) 김형석, 67면.

51) 이덕환, 7면 이하.

52) 김형석, 68면.

<후기>

본 논문을 달고하고 학회에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후,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법무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된 뒤 2009년 12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새로 마련된 성년후견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후견계약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개정안의 특징과 내용에 관하여는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참조.

<참고문헌>

- 김선이, 독일 성년후견법, 고령사회와 성년후견제도, 한국법제연구원, 2003
- 김형석,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개정의 방향과 기본내용, 한국민사법학회 2009년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 민법안심의회, 상권, 1957
- 백승흠, 현행 성년자보호를 위한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으로서의 성년후견제도, 민사법학 제24호, 2003
- 백승흠, 성년후견의 감독에 관한 고찰—독일과 일본의 제도를 비교하여—, 가족법연구 제20권 2호, 2006
- 백승흠, 성년후견제도의 입법방향, 민사법학 제18호, 2000
- 성년후견제도연구회, 성년후견제도 연구, 2007
- 송호열, 임의성년후견제도, 동아법학 제31호, 2002
- 송호열, 성년후견법제화의 기본원칙과 방향, 동아법학 제33호, 2003
- 이주형, 성년후견제도, 민족법학논집 제4집, 2003,
- 이명현, 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애드보커시를 위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연구, 사회법연구 제1호, 2003
- 이덕환, 미국에 있어서 성년후견제도의 개혁, 한양법학 제11집, 2000
- 제철웅, 성년후견제도의 개정방향, 민사법학 제42호, 2008
- 제철웅·오시영·백승흠·박주영, 행위무능력 제도의 재검토, 법무부, 2007
- 제철웅·박주영,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논의와 영국의 정신능력법의 시사점, 가족법연구 제21권 제3호, 2007
- 홍훈의, 프랑스의 성년후견제도, 고령사회와 성년후견제도, 한국법제연구원, 2003
- 本澤巳代子, 高齢者の財産管理・監護, Jurist 民法の争点(内田貴・大村敦志 編), 2007